

해 넘긴 임단협 매듭짓고 97일 만에 땅으로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고공농성 종료 ...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지회장이 고공 농성장에서 내려 왔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교섭에 합의했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CCTV 첩탑 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오후 땅을 밟았다. 원청인 한화오션에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2024년 임단협 타결,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5일 첩탑에 오른 지 97일 만이다.

오후 1시 45분께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크레인을 타고 첩탑 위 김형수 지회장을 만났다. 김형수 지회장은 장창열 위원장과 함께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7일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2024년 임금·단체교섭 의견접근을 이뤘다. 지회 조합원들은 18, 19일 이틀동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성률 91.5%로 가결. 한화

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 ▲상용직 고용 확대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합의했다. 또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한화오션 사측은 2022년 도크 점거 파업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라며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상여금은 2024년 교섭 핵심 쟁점. 지회는 상여금 원상회복을 주장해왔다. 하청업체 사용자들은 그간 조선업 불황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을 빌미 삼아 상여금을 대폭 삭감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상여금으로 월 기본급 50% 지급하던 것을

100%로 높인다.

오후 2시 30분쯤 김형수 지회장이 크레인에 올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금속노조 깃발을 손에 쥐고서 내려왔다. 지켜보던 금속노조 조합원과 연대 시민들이 환호했다.

지회 조합원들 부축을 받아 크레인에서 나온 김 지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섭 내내 원청 한화오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반드시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려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법 개정 투쟁에 함께 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우리 지회 조합원들 정말 고생 많았다. 연대 시민들 감사하다. 한국유타칼 지회 박정혜 동지,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보다 먼저 내려오게 돼 미안하다. 그들이 땅을 밟을 때까지 연대하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미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노조법 개정 서둘러야”

금속노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닷새간 전국순회투쟁 마무리

금속노조가 국회·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원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고법인 헌법이 노동자에게 노조 만들고 파업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데도 노조법 2조, 3조 탓에 노동자들은 노동삼권 행사를 제약받는다”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노조 설립·가입부터 막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21,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명목으로 금속노조 요구보다 축소된 내용을 제출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이 중요하다. 종전 개정안으로는 안

된다.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제대로 고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해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협소한 조항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금속노조는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자를 노동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국회 통과안을 보면 민주당은 근로자 정의를 현행 노조법 내 용으로 고집한다.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정도로 본다.



노조법 2·3조 피해 증언도 나왔다. 이상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 자본이 불법파견을 숨기려고 자회사를 만들었다. 2021년 지회가 자회사 불법성을 알리고 고용보장과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손해 배상 246억 1천만 원을 청구했다”라며 “천문화적인 손해 청구

에 조합원들은 위축됐고 노조 탈퇴가 이어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사실상 원청이 하청 노동자 고용 등 모든 것을 좌우하지만 노조법 2조 탓에 아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도 사용자는 노조법 3조를 방패 삼아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이라며 “더 미룰 수 없다. 노조법 2조, 3조를 제대로 바꿔 원청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손해 청구를 없애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16일부터 5일간 진행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두의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순회투쟁’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울산 HD현대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현대위아, 전남 광양 포스코, 대전 한국타이어, 서울 현대차 본사를 들러 사용자에게 원청 교섭공문을 전달했다. 현대차 원청에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즉각 고용승계하라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경기 이앤에스(삼성전자 화성)에서는 노조 탄압 중단을, 서울 효성그룹 본사에서는 계열사인 신성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